
브라질 탄핵 정국: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교수

핵심어: 호세프, 탄핵, 노동자당, 브라질민주운동당, 부정부패, 권력투쟁, 중남미, 라틴아메리카

I. 서론

2013년 6월부터 시작된 정치 위기가 결국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고 있다. 집권 초기 브라질 역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 차별을 극복한 지도자, 여성 정치인이 살아남기 어려운 척박한 정치 토양에서 좌파운동가의 전력을 지니고 있는 호세프 대통령의 승리는 이중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브라질 여성의 승리였다. 또한 좌파 게릴라 운동에 참여한 사회운동가로서, 룰라 정부에서 경험을 쌓은 여성 행정가로서의 이미지는 성장하고 있던 브라질 경제를 이끌 재목으로서 손색이

없었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당 내에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창당과 투쟁 과정에 참여한 창당구성원이 아니라는 약점과 대선 과정에서는 정치적 아버지인 툴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후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또 다른 약점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좌파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툴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과 다른 정치색을 띠는 지우마주의(Dilmismo)를 위해 노력했다.

지우마주의란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분야에서는 성장을 유지하고, 건전한 경제운영을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균형을 달성하고, 국내소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원자재 경제 붐의 쇠퇴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월드컵 개최, 대선과 총선, 리우 올림픽 준비, 사회복지 프로그램 유지 등으로 법률이 정하는 재정적자 한계를 넘어버렸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탄핵을 받게 되었다. 또 대외 환경 악화로 헤알화가 폭락하면서 수입 상품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증가했다. 이처럼 경제 악화가 호세프 대통령 탄핵의 출발점이었다.

정치 분야에서 호세프 대통령은 선거제도 및 선거자금법 수정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으나 의회의 강력한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노동자당과 브라질민주운동당 이외에도 여러 정당이 연합하여 행정부와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나 입법 과정에서 유연한 협상력과 리더십이 필요한데, 호세프 대통령은 그런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결과, 툴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2%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제 지우마주의는 경제상황 악화와 정치력 부족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2014년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집권여당 내의 노동자당과 브라질민주운동당

간의 권력투쟁이 시작되었고, 이로써 호세프 대통령은 위기에 직면한 경제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호기를 놓쳤다. 선거구 획정 개정, 정치 후원금 규모 제한 등을 포함하는 정치개혁 법안들이 개혁적 요소가 퇴색된 채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 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마찰을 빚었다. 호세프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좀 더 살펴보면 적절한 시기에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그런 시점을 찾아보고, 호세프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피할 수 없는 경제 이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브라질 경제는 거의 10년간 안정적으로 성장했으나 경제 체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일부 학자는 산업구조가 원자재에서 제조업으로, 대외시장 의존에서 건전한 내수시장으로 변모해 경제 기초가 좋아졌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온다고 해도 견뎌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2008년 미국 서브모기지론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원자재 경제 붐이 끝나자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하향곡선을 그렸다. 여기에는 월드컵 개최를 위한 과도한 인프라 투자, 2기 성장촉진프로그램(PAC)에 따른 투자 유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유지 등으로 재정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된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브라질의 연방재정은 재정책임법이 발효된 이후 조세수입이 줄어들면 정부지출도 연동해서 줄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 폭이 급속도로 악화되지는 않는다.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은 대외환경 악화,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헤알화 폭락으로 경기가 갑

자기 나빠진 것과 관련이 있다. 또 하나는 인프라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월드컵 관련 시설에 집중 투자했으나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부각된 부분이 있다. 심지어 월드컵 경기 결과가 축구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승배한다고 해야 하는 브라질인의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희생한 국민에게 치욕을 안겨준 것도 재정적자에 대해 필요 이상의 우려를 낳은 요인이다.

호세프 정부의 경제적 정통성은 안정적인 성장과 빈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분배에 있다. 이처럼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과 분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해야만 분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브라질이 직면한 경제위기는 성장도 분배도 없는 상태로 변했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브라질 경제는 호세프 정부 초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어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빈민 우선의 분배정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었다. 2013년 6월 항쟁은 성장과 분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표출된 것이었는데, 호세프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을 위해 결국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을 선택했다. 여기까지가 브라질의 국내 경제 운용의 결과이다.

그런데 2014년 유가 하락이 진행되면서 경제의 원동력이던 석유 관련 산업이 불안해지고, 브라질석유공사가 발주한 많은 건설 프로젝트가 하나둘씩 취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줄어들었으며, 헤알화의 가치도 폭락했다. 브라질은 수많은 생필품과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 부담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었다. 일반적으로 성장을 우선시하는 집단은 보수적이며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엘리트집단이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엘리트 집단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어 더욱더 시장주도 경제에 집착하게 된다. 내친김에 얘기하자면, 그동안 분배를 우선시하는 노동자당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는 엘리트 집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

〈그림1〉 브라질 경제 현황



출처: <http://infohoney.tistory.com/128>

는 원자재 수출 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분배는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토대였다. 노동자당 집권의 가장 큰 결과물은 룰라 정부의 생계지원정책 ‘보우사 파밀리아’¹⁾와 호세프 정부의 ‘나의 집과 나의 삶’(Minha Casa, Minha Vida)을 통해 빈민층이 감소하고 중산층이 증가한 것이다. 이런 정책으로 노동자당은 저소득층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호세프 1기 정부 말에는 보우사 파밀리아의 지원 금액을 줄이거나 없앨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저소득층에게 불안을 심어주기도 했다. ‘나의 집 나의 삶’ 프로젝트는 호세프 정부가 중하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 4월부터 추진한

1)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는 연방 정부에서 시행하는 빈곤층 대상의 조건부 현금지원 정책이다. 다시 말해서 빈곤층 가정의 아동 수, 예방주사 등을 위한 정기적 의료시설 방문, 자녀의 학교 출석 등을 조건으로 하여 매달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책이다. 이런 정책의 재원 역시 경제성장을 통한 조세수입의 증가분으로 마련했다.

이와 같이 호세프 정부의 경제 운영은 정권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 운영 성과가 좋지 않으면 특정 집단이 불만을 표출하기 때문에 사회집단 간의 대립과 충돌이 발생한다. 사실 이러한 대립과 충돌은 호세프 대통령의 정책조율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호세프 대통령의 정책조율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는다.

III. 연립정당의 이전투구

브라질의 좌파학자 마르쿠 노브리(Marcos Nobre)는 민주화 이후의 의회 정치를 ‘브라질민주운동당주의’(Pemedebismo)로 정의한다.²⁾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1964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1965년 인위적으로 정계를 개편하여 양당체제를 만들었다. 양당이란 바로 여당인 국민혁신연합(ARENA: Aliança Renovadora Nacional)과 야당인 브라질민주운동(MDB: Movimento Democrático Brasileiro)이었다. 그러다가 1979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주앙 피게이레두 장군은 민정이양을 약속하고, 다당제를 도입했다. 이로써 브라질 정치무대에 수많은 정당이 등장했다. 이듬해인 1980년 브라질민주운동은 당명을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Partido do Movimento Democrático Brasileiro)으로 바꾸고, 1984년 민주화 이후에는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다. 그런데

2) Theófilo Codeço Machado Rodrigues, “Estado E Classes Sociais No Brasil: um estudo sobre os governos Lula e Dilma”, *Marx e o Marxismo 2015: Insurreições, passado e presente*, Universidade Federal Fluminense – Niterói – RJ – de 24/08/2015 a 28/08/2015

민주화 이후 어떤 정당도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브라질민주노동당과 정치적 협약을 맺었다. 노동자당도 정권을 창출한 이후 한 번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노동자당의 정책이나 법안도 브라질민주노동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부분 원안 수정되거나 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브라질민주노동당의 정치 형태를 가리켜 브라질민주노동당주의라고 부른다.

현재 브라질의 정치 위기는 2015년 하원의원 의장선거를 두고 펼친 권력투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은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있다. 따라서 2년마다 시행되는 상·하원 의장 선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노동자당 정부로서는 상·하원 의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축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호세프 대통령 집권기간 부통령, 상·하원 의장이 모두 브라질민주노동당 소속이었다. 2015년 2월 하원의장 선거를 앞두고 호세프 대통령은 브라질민주노동당 소속의 에두아르두 쿵냐(Eduardo Cunha) 하원의원과 큰 마찰을 빚었다. 호세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노동자당의 아를린두 시나글리아(Arlindo Chinaglia) 후보를 지지했으나 쿵냐의 승리로 끝났다. 쿵냐는 하원의장에 당선된 직후 더는 정부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궁이 민정수석을 통해 의장선거에 개입했지만 양갈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만 보아도 호세프 정부와 입법부의 마찰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입장 차이는 연방 재원을 주와 시 정부에 교부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연방협약(Pacto Federativo) 수정과 정치개혁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호세프 대통령은 연방협약 수정이 연방 권력을 약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개혁 안을 놓고 지우마 대통령과 연립정당 간의 합의 도

출에 실패했다. 정부와 연립정당 모두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그러면서 강력한 하원의장 쿵나가 정치개혁을 의회 주도로 이끌어 나갔다.

이런 가운데 호세프 대통령이 분식회계를 통해 재정적자를 은폐함으로써 재정책임법(Lei de Responsabilidade Fiscal)을 위반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탄핵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다. 재정책임법의 정식명칭은 제101호 보완법(Lei Complementar nº 101)이며, 2000년 5월 4일 공포되어 다음 날부터 시행된 것으로, 지방정부, 연방직할구,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징수하는 세수 규모에 따라 각 정부의 지출을 강요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법은 브라질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부의 독단적인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집행법(Lei de Diretrizes Orçamentárias)에 따르면, 정부는 사전에 공표된 기초예산수지를 준수할 책임이 있는데, 호세프 대통령은 이를 준수하지 못했다. 따라서 탄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산집행법 개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법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탄핵이 공론화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계급 연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노동자당과 그동안 큰 마찰 없이 연립정부를 운영해온 브라질민주운동당 사이의 간극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원은 2018년 대통령 선거에 있다. 양당이 차기 대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권력투쟁에 돌입함으로써 균열이 생긴 것이다. 양당 사이의 정치협약은 2014년 총선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깨지기 시작했다. 히우지자네이루 주지사 선거에 브라질민주운동당의 루이스 페르난두 페자옹 부주지사가 입후보하기로 양당이 합의했으나 당시 주지사이던 브라질민주운동당의 세르지우 카브라우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하자 노동자당의 링지베르기 파리아스가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이로써 양당 사이의 암묵적 합의가 깨

진 것이다. 이런 사례는 북동부와 중서부를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했다. 브라질민주운동당의 입장에서는 이미 정치협약은 깨졌고,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이다. 노동자당의 입장에서는 이미 차기 대선 후보로 룰라 전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면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월 미나스 제라이스에서 열린 브라질민주운동당 전당대회에서 미세우 테메르(Michel Temer) 부통령은 공개적으로 2019년에는 브라질민주운동당이 정권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정치적으로 보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2014년에 재선되었을 때부터 이미 레임덕에 봉착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재선 선거운동 막바지에 열세를 면치 못하자 호세프는 룰라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다. 2010년 선거에서도 룰라의 후광으로 당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기에 의회에서뿐 아니라 노동자당 내에서도 호세프의 정치적 리더십은 큰 타격을 받았다.

IV. 뿌리 뽑지 못한 부정부패 문화

예산 분식회계로 촉발된 탄핵 요구가 급속하게 확산된 배경에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부정부패 스캔들이 있다. 브라질 국민은 우파 정권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던 부패 스캔들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도덕성을 강조한 노동자당에서조차 우파정권만큼 많은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테면, 최근에 브라질 사회를 뒤흔든 사건은 이른바 ‘세차 작전’(Operação Lava Jato)이라고 부르는 브라질석유공사 비리사건 수사이다. 수사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현 정부에 대한 브라질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2014년 3월 17일

이래 지금까지 28차례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매번 새로운 정치인이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³⁾

이 작전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멘살라웅(Mensalão) 스캔들⁴⁾의 주요인물 중의 한 명인 진보당(PP)의 주제 자네니 전 하원의원 수사에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우베르투 요세프와 카를루스 사테르가 주목을 받았다. 요세프는 주립은행(Banestado) 스캔들 때문에 수사 선상에 올라 있던 사람으로, 2013년 7월에 카를루스 사테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사테르가 주도한 자동세차 작전(Operação Lava Jato), 네우마 코마다가 주도한 돌시 비타 작전(Operação Dolce Vita), 요세프가 주도한 비오니 작전(Operação Bidone), 하울 스토크가 주도한 카사 블랑카 작전(Operação Casa Blanca) 등의 사건이 밝혀졌다. 호세프 정부만이 아니라 노동자당 정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룰라 정부에서도 부정부패가 있었던 것이다. 노동자당의 통치 원칙 중 하나가 도덕적인 거버넌스 추구이기 때문에 부정부패는 스스로 정당성을 해치는 일이었다.

아무튼 브라질석유공사 비리사건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정부패 사건 수사와 차이가 있다. 브라질석유공사의 주식이 상파울루 주식시장과 뉴욕주식시장에서 동시에 거래되기 때문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해외부패방지법의 감독을 받고 있다. 2014년 2월에 반부패규제준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부패방지법(12,846/2013 법) 발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3월에 통과되었다. 그동안 부정부패 문제는 브라질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법안 통과로 상황이 바뀌었는데, 2014년 11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내부조

3) 자동세차기 조사 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https://pt.wikipedia.org/wiki/Opera%C3%A7%C3%A3o_Lava_Jato 참조.

4) 멘살라웅은 룰라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의원의 표를 매수하는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한 부패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5년 브라질노동당(PT)의 당대표인 호베르투 제페르송이 밝히면서 알려졌다.

사와 관련된 증거서류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리고 조사를 이끌고 있는 쿠리치바 연방재판소 세르지우 모루(Sérgio Moro) 판사가 미국 하버드 법대 연수시절 해외부패방지법에 대해 접하면서 부패문제에 대한 전문가라는 점에도 이전의 수사와 다른 점이다.

그렇지만 브라질석유공사 비리사건을 브라질 국내문제로 다룬다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또한 노동자당 집권기에도 반복적으로 부정부패가 계속되는 것은 정권의 성격과 부정부패의 발생 빈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 원인은 부패에 대한 인식, 책임성에 대한 인식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부패행위가 발생했을 때 부패 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동자당 정부가 도덕성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노동자당은 유토피아적 대중조직에서 출발해 경영정당(Managerial Party)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정권 창출 이전에는 시민이 정부의 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감시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당의 주요 기능 중 하나였다. 그러나 룰라에 이어 호세프까지 연달아 집권하면서 시민은 이제 감시자가 아니었다. 시민이 국가나 사회에 이상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단계를 넘어 국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정책의 결과를 평가받는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로 인해 원래 노동자당이 가지고 있던 이념 정당과 사회운동을 이끌어 가는 기능이 점점 약해졌다. 따라서 정당의 정치 전략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6월 항쟁에 참여한 대부분 계층이 신중산층이거나 젊은층 중심이었다면 2015년 3월에 시작된 시위는 주로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6월 항쟁보다는 결속력이나 조직화 정도가 낮았지만 역시 반정부적 성향을 띠었고, 엘리트의 참여가 확산되었다. 심지어 노동자당의 정치 전략이 고갈되었고, 이로 인해 브라질 좌파의 역사적 사이클이 끝난 것이라고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정치적인 측면에

서 보면 노동자당이 전략적 선택의 실패에서 정치적인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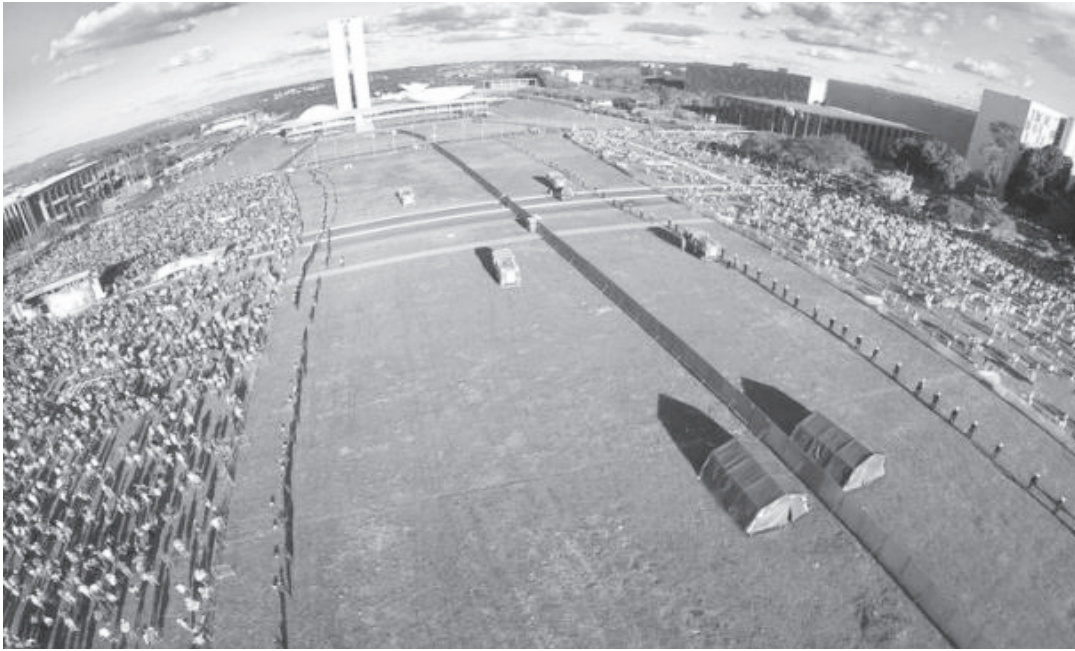
또 하나는 노동자당이 지배하면서 자율적인 시민사회가 약화되었다. 지난 10년간 시민 단체와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정부여당의 공무원에 임용되면서 자력 효과(magnet effect)가 나타난 것이다. 사회운동 지도자들이 정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기대하면서 독자적인 혹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정부 관료의 기능까지 하게 되었다. 그동안 전통적인 사회운동단체와 노조가 노동자당과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제3 섹터로서 기능했는데, 현 단계에서는 그 역할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사회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성격의 시민사회는 전통적인 사회운동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V. 정치 엘리트의 선택

하원에서 탄핵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의회 광장에는 지지파와 반대파가 경찰 방호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사진1〉). 이 광경은 앞으로 전개될 혼란한 정국을 잘 설명해준다. 예산 분식회계 혐의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쟁만이 남았다. 투표를 마친 의원들은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 하나같이 자신의 가족, 지지자와 선거구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탄핵의 경제적인 원인은 기대한 경제성장 구현 실패, 재정불균형과 정부예산 분식회계, 계획된 분배체계 미작동 등으로 정리된다. 예산 분식회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경제가 악화되면 정치변동의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치가 안정

〈사진1〉 탄핵 찬성과 반대 지지 집회



브라질 의회 앞 정부부처광장(Esplanada dos Ministérios)에 모인 탄핵 찬성과 반대 지지 집회
출처: Foto: Juca Varella/Agência Brasil

되어 있다면 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치변동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연립정부 내의 정치적 합의가 깨진 것이 원인이었다. 따라서 정치적인 원인은 노동자당이 유지하고 있던 계급 조정 모델 혹은 계급 연합 모델의 붕괴이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작동원리인 연합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노동자당과 브라질민주운동당이 2018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정쟁은, 호세프 대통령이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발전했다.

여기에 덧붙여, 사회문화적 환경이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에 불을 지폈다. 브라질석유공사 비리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정부여당의 많은 정치인이 연루된 것이 밝혀졌고, 호세프 대통령이 브라질석유공사의 이사로 있을 때도 이

미 비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이런 의구심이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면서 경제위기와 맞물려 노동자당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연립정당과 야당이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냈다. 결국, 원자재 경제가 끝나면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통치위기로 발전했고, 그 위기와 더불어 차기 대권을 두고 펼쳐진 정쟁의 결과물이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으로 나타난 것이다.